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

황 창 순**
박 수 경

- I. 서 론
- 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III. 민간참여 및 투자의 이론적 배경
- IV. 연구결과의 요약
- V. 정책적 대안
- VI. 결 론

I. 서 론

새로운 문화와 규범이 교차하는 변동과 혼돈의 시대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기초하여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목표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에 나타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구체적 관심은 청소년 육성법의 제정(1987), 청소년국의 청소년 업무총괄(1988), 청소년 헌장의 공포(1990), 체육부의 체육청소년부로의 명칭변경(1991), 한국청소년학회의 결성(1991), 한국청소년 기본법의 제정(1991)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청소년 심리학이나 청소년의 범죄론 등에 한정되었던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여러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공동학문적 *interdisciplinary*인 접근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최근 완성되어 발표된 청소년 기본계획의 중점*목표에 잘 반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계획의 목표는 첫째는 청소년의 자율, 자발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 둘째는 보다 나은

*이 논문은 본원의 1992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황창순(선임연구원), 박수경(연구원)임.

기회가 부여되는 청소년 성장요람 조성, 세째는 선진, 민주, 통일 조국에 대비한 청소년의 자질 배양 등이 있다(한국청소년 기본계획 완결편, 1991).

이러한 중점 목표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목표이긴 하지만 정부는 향후 10년간 자치단체별, 청소년단체별 사업량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992년도 부터 이 계획을 적용시키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서 청소년을 육성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가지 주요 부문으로 활동을 조직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수련거리의 개발이나 보급, 수련터전의 마련,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그리고 민간 청소년단체의 지원등이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 환경의 개선이나 불우청소년의 지원 같은 더욱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청소년복지 개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수련 활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 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또 청소년들이 참석해서 즐길 수련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조건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건이 조성되어야 청소년 수련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인데 청소년 수련사업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예산이나 노력만으로는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청소년 수련사업이 질적으로 충실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참여와 투자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함과 동시에 민간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인식되기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연구의 초점을 둔다. 민간의 범주도 기업으로 대표되는 경제부문, 일반 시민이나 다양한 직능집단으로 표현되는 사회부문, 그리고 여러 종류의 청소년단체로 분류할 수가 있다. 민간의 참여 및 투자 확대의 방법도 크게 나누어 일반 국민들이 직업 범주별, 계층별, 도농별, 성별 구분없이 넓게, 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고, 개별 기업이나 청소년단체 등 특정의 사회 집단이나 구성체가 그 집단 단위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민간참여의 기본 정신은 뜻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미래 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 수련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민간의 범주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 민간 영역의 꽃이라 할 만한 기업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민간의 자발적 결사체나 여러 이익집단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일반국민의 참여 가능성도 중요하고 또 연구되어야 할 주요 주제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참여 및 투자 가능성에 관심을 줄히고 다른 민간영역의 참여 방안은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조사로 구성되며, 실증조사는 두가지의 다른 조사가 수행된다.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고찰은 이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 일부 의존하고, 기업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에 관련된 기존의 경제학과 경영학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참여활동 및 청소년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 문헌조사 (2) 기록분석 *document analysis* (3) 설문조사 (4)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방법을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조사는 국내외의 기존의 연구결과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기업이 이제는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문헌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참여활동에 관련된 국내외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반 논쟁을 살펴보고 한국기업의 사회참여활동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수련사업에의 적용가능성을 도색해 보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학계 및 대기업 재단의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들의 의견을 얻

구문제의 설정 및 조사표 설계 등 연구의 전반에 걸쳐 폭 넓게 반영하였다.

실증조사는 두가지의 상호 연관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는 기업의 사회참여활동 및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태도와 현황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 *mailed questionnaire*이다. 조사의 내용은 현재 한국의 주요 상장 기업이 펼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사회봉사활동 및 좁은 의미의 청소년 수련 및 지원사업의 규모, 내용과 특징, 기업의 사회봉사활동, 청소년 육성 및 수련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이다. 설문조사는 우선 약 600개 가량의 주요 상장 기업 가운데 적절한 대상을 골라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번째 실증조사는 9개의 주요 재벌기업에 대한 사례조사 *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무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록식 방법과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면접 조사의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사례조사의 내용은 비교적 사회봉사 및 참여활동에 적극적인 대기업의 특징을 비교론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모델의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III. 민간참여 및 투자의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몇몇 학문분야에서 민간의 일반적인 사회참여,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다. 행정학에서의 논의가 대표적인데 주로 행정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어떻게 민간의 참여나 민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초점으로

논의되었다.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복지국가의 기치 아래 여러가지 복지사업의 민간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넓혀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간의 범위를 조금 좁혀서 현대 산업사회의 대표적 민간영역인 기업의 사회봉사활동을 논의하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특정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는데 반해, 앞서 언급한 행정서비스의 민간화나 사회복지의 민간화는 수혜자의 입장을 중시하거나, 또는 민간화를 유도하는 공적영역,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을 채택한다고 할 수 있다.

1. 공공 서비스 공급의 민간화

청소년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및 투자의 이론적 근거는 우선 행정학에서 논의되는 공공 서비스 공급의 민간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대의 복지지향 사회에서는 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연관되어 청소년 사업의 요구중대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매우 낮아 행정 서비스의 일종으로서의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재원을 자체에서 조달하고 있지 못하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수요의 증대를 감안하면 청소년 수련사업에의 재정부족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화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전력이 행정학에서 논의되고 있다(Savas, 1987; 박경원, 1989). 민간화란 사바스(Savas, 1987)에 의하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활동으로서 정부의 관여도가 높은 서비스 공급에서 관여도가 낮은 공급으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던리비

(Dunleavy, 1986, p.13)는 민간화를 공공관료제에 의해 수행되던 서비스나 제화의 생산활동을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비공식조직에 영구히 이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콜데리(Kolderie, 1986, p.286)는 서비스의 공급이란 면에서 공급 *provision*과 생산 *production*의 의미 분리를 주장하면서 서비스 생산의 민간화 *privatizing production*란 단순히 서비스 생산주체가 정부기관에서 비정부조직으로 전환 혹은 대치됨을 의미하며, 서비스 공급의 민간화 *privatizing the provision of service*란 구매자, 규제자, 기준설정자, 정책결정자로서만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 주민 자신이 그 서비스의 구입여부와 대가 지불여부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됨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블렌카트(Blankart, 1985)는 민간화의 문제를 네가지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니슨(Donnison, 1984)은 민간화가 보수주의적 입장 즉, 자원배분과 문제관리에 있어 가격 메카니즘과 시장관계가 가장 능률적인 방법이라는 신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성격을 규명하면서, 민간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민간화의 의미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부기능의 축소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기능은 국가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민간화의 의미도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민간화가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르그랑과 로빈슨(Le Grand and Robinson, 1984)에 의하면 정부는 보통 제화나 서비스의 공급 *provision*, 보조금 *subsidy* 및 규제 *regulation*의 세가지 형태로 국가의 사회 경제활동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 기능에 따라 민간화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화의 틀은 민간화가 요구하는 정부개입의 축소나 재거형태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개입 대신에 제시된 대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화의 의미는 주로 민영화와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민영화는 공기업의 주식매각 등을 통한 민간화를 의미하며, 공공서비스의 민간화는 주로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민간화의 개념적 정의를 청소년 수련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화나 민간참여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대개 몇가지 요인이나 압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청소년사업의 비용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보다 좋은 정부를 향한 실용주의적 압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로는 사업확대를 지향하는 기업계의 압력이 민간 참여의 확대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정부에 많은 지출을 민간부문에서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약화로 부터 오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요구가 주요 압력요인으로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더욱 많은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Savas, 1987, p.5). 요약하면 행정학적 관점에서 민간참여의 초점은 지방재정의 자립도의 미비함과 중앙정부의 재원부족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있다. 다시 말해서 재원부족문제로 제기될 재원조달방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계개편과 새로운 재원의 확보등의 방안들이 있지

만 이러한 대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며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 바로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전략이고, 이와 같은 원리로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화 및 민간참여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복지학에서 논의되는 복지 서비스 공급의 민간참여론에서 청소년 수련사업의 민간참여방안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추출해 본다.

2.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역할이론

행정 서비스 공급의 민간화 쟁점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청소년 사업의 민간참여에 유용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공(公)과 민(民)의 역할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쟁점은 정부 주체의 사회복지와 민간 주체의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과 민의 역할 규명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청소년사업의 공공과 민간의 관계설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면 유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에서 논의되는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의 책임과 관련된 이론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회복지의 평행론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취급하는 대상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각기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Helen Clark, 1947). 즉,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민간기관은 자립과 재활이 가능한 빈민을 대상으로, 국가는 자립이 불가능한 빈민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은 개별원조적, 인격감화적, 고도의 사례별 작업 casework이 요구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는 빈민의 치료 및 자립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대상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수용, 보호하는 기능과 금전 급부단을 행함으로써 국가와 민간이 중복됨이 없이 각기 독립적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론은 사회복지의 사다다리 이론 *extention ladder theory*이다. 웹(webb)부부가 주창한 사다다리 이론(Webb, 1914, Pp.703-707)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 마치 사다다리 모양으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는 국가의 최저 생활 보장을 국가의 책임 하에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기초로 점차 상층 부분에는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치시켜가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공공 부분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 최저 수준 *minimum level*의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부분은 이들 중 특별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충적인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Kamerman, 1983, p.6).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의 독자적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 평행봉 이론과는 다른 공영 우월성의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행봉 이론에서는 공영보다 민영의 우월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사다다리 이론에서는 민영의 우월성을 편견이란 관점에서 보는데 민영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영의 기초성, 보편성,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만두, 1987).

마지막으로 공공대행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실패와 사회복지비의 증가에 따른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 공공대행이론은 상당량의 공공자금이 민간부분에 들어감으로써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

이론에서 민간부분은 주로 정부의 규제를 통해 형성된다. 또 이 이론 뒤에는 공공부분은 바람직한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서 민간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깔려있다(Kamerman, 1983). 공공대행이론이란 국가가 바람직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규제를 통해 민간 부분 *private sector*을 형성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개념화되었다. 이는 국가와 민간기관은 계약상의 조정을 통해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국가는 민간으로부터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Kamerman, 1976).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누가, 무슨 재원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민간역할의 특성이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3. 기업의 사회참여활동

다음에서는 민간영역의 범위를 기업으로 한정시켜 기업의 관점이나 입장에서 청소년 사업에의 참여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는가를 알아본다. 기업의 입장에서 청소년 사업이란 사회봉사활동의 일부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회참여활동과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참여활동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관련된 개념이면서도 약간은 다른, 그리고 어느정도 광의적인 개념들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윤리 *corporate ethics*, 기업의 사회정책이나 기업의 이해자 관리 등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활동영역이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체계의 하나의 하부체계로서의 기업은 사회속에 존재하면서 사회의 다른 하위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경제체계의 핵심적 주체로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해서 시장경제에 기여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의 거의 모두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회의 존립과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기업의 사회활동 또는 참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사회참여 활동 고유의 개념적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기업과 사회와의 관련성이 기업환경론(신유근, 1986)과 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 되었다 하더라도 좀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논리를 넘어서서 보다 크고 넓은 보편적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기업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와 사회 일반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유근, 1986, Pp.225-226; 신유근, 한정화, 1991). 이에 반해서 기업윤리란 일반적인 윤리의 범주 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윤리란 일반적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악에 대한 판단기준의 체계로 정의됨에 비추어 기업윤리란 기업경영이라는 상황하에서 경영자나 종업원들의 태도에 대해 형성된 도의적 가치로서,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늠하며 기업과 사회에 다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의 개념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지향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신유근, 1986, p.226).

이에 반해 기업의 사회참여활동이란 기업의 전통적이며 본질적인 경제활동을 넘어서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즉 사회속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영역 가운데 기업의 본질적 기능으로 간주되어 온 경제적 기능의 수행을 넘어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특히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의 영역중에서 특히 대외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가시적 기업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기업참여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문화, 복지, 체육이나 기타의 기업이 할 수 있는 활동, 기업이 재정적으로 가담하는 기업의 기부행위나 재정의 직접부담, 또는 각종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활동, 그리고 범사회적 또는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한 사회운동에의 참여와 같은 활동들을 포함한다. 요약하면, 기업의 사회참여활동이란 사회나 일반인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제위주의 역할을 넘어서 기업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 참여해서 사회와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고 상호 협동하면서 수행하게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참여, 기업의 사회봉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기업윤리라도 관련이 깊은 주제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존재양식과 기업의 사회참여활동의 동기에 대한 몇가지 관

점에서 구분하면 편리하다. 기업의 존재양식과 사회적 기능을 구분하는 몇가지 기준 가운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중심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문제로서 기업의 중심이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인지 아니면 주주가 아닌 제삼자인지의 문제이다.

기업의 소유주를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보는 주주모형 *stockholder model*은 전통적으로 기업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주주들은 기업의 경영진을 선출하게 되며 이들 경영진을 주주들의 이익, 즉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주주들의 단순한 대리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고 기업행위의 중심은 주주가 된다는 주장이다(정구현 외 1991; Buono and Nichols 1990; Freeman and Reed, 1983).

이에 반해 이해당사자 모형 *stakeholder model*은 기업의 중심 또는 기업행위는 주주만이 아닌 기업의 이해당사자, 즉 기업이 경제행위를 하게 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인 주주, 피고용인, 노조, 소비자, 원자재 공급자,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경제기관, 그리고 특정 또는 공익의 이익집단 등 모두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기업주 또는 주주들의 소유가 아니며,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경제행위를 해야 하는 경제주체로 파악하는 관점이다(신유근, 한정화 1991; 정구현 외 1991; Buono and Nichols 1990).

기업이나 기업을 소유한 개인의 박애심이나 자선심에서 나오는 자선적 동기와는 달리 기업

이란 공적 수탁자(public trustee)로서 기업의 의사결정과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기업의 사회 참여 활동의 청지기적 동기(stewardship motive)에 따른 활동이라 부를 수 있다. 앞서 기업의 소유주의 관점에서 논의한 이해관계자 모형과 연관이 깊은데, 청지기적 동기를 주장하는 관점의 핵심은 경영자는 공적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 또는 수탁인으로서 기업의 경영계획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적 극대이윤보다 장기적 적정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지기적 동기는 기업의 경영이 소유경영자 중심에서 전문경영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 경영인은 단순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간의 관계조정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제도적, 비제도적 요인 또는 재정적, 비재정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산이나 매출규모, 그리고 순이익이나 업종, 업종내의 경쟁력이나 독과점업체 여부 등이 중요한 요인을 수 있다. 시장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규모, 지역사회 특징, 다른 회사와의 관계와 같은 비시장적 요소도 또한 중요하다. 주요 비시장적 요인은 대개 제도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회사 자체의 조직적인 구조나 다른 회사 및 조직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회참여활동이나 또는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기업제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주요 기업들은 대개 세금을 납부하기 이전 순이익의

1~2%만을 기부한다(Useem, 1988). 하지만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사회참여활동을 기업경영의 무시못할 사항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매우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시장지향적인 전략적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활동은 시장적 고려와 제도적 고려의 혼합체의 산물이며 두가지 모두가 대부분의 회사의 사회활동이나 봉사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요인과 제도적 요인은 그래서 왜 어떤 회사는 사회봉사나 청소년사업에 너그러운데 반해 다른 회사는 그렇지 못한가를 설명하는 참여의 수준을 형성한다. 또 활동영역의 분포를 형성하는데 왜 어떤 기업은 교육을 중시하는데 반해 다른 기업은 지역사회봉사를 중시하는가를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시장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공통적 영향이 기업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분명히 나타난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서 실시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IV. 연구 결과의 요약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참여활동이나 청소년사업의 동기가 취지가 대체적으로 전전하고 자율적인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한때 시대적 분위기가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 사이의 위상이 불확실했고, 또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여러가지 강제적 지출이 많았지만 90년대의 한국기업의 사회활동이나 청소년사업에 대한 참여 및 투자의 경향은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주요 기업에서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긴장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사회참여활동이나 청소년사업에 대한 참여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경계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몇몇 재벌그룹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음을 특이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둘째, 대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참여활동이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으며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풍토가 점점 단기적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미지 제고를 지향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사회참여활동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몇몇 기업에서 참여활동의 기획이나 조직화에 대한 애로점 때문에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 종사자들이 사회참여활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사회참여활동이나 청소년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예산이나 자금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다. 많은 기업체가 현재의 경제상태를 장기적 불황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때문에 생산 외적 활동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재벌그룹의 경우는 경제적 불황보다는 사회참여나 청소년활동 그 자체의 사회적·기업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고, 그래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소규모 기업에 비해 덜 받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활동이나 청

소년활동에 대한 기업체의 기본적인 인식과도 연관이 있다. 말하자면 생산활동의 결과로 생긴 여유분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만약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수 밖에 없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참여활동도 일종의 간접적인 생산비용이거나 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경제적 불황에 관계없이 사회참여활동에 적극적인 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표본기업체의 90% 정도가 한가지 이상의 사회참여활동에 종사하는 데 반해, 한가지 이상의 청소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청소년 사업에 관한 이러한 수치는 낮은 편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 아직 활동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참여활동의 구체적 내용도 장학사업 중심의 사업에서 점차 지역사회지원 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다양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사회참여나 청소년 지원사업에 참여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다른 편에서는 지방화 시대와 복지국가 시대를 향한 미래의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기업이 사회참여활동을 다양화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현재의 한국기업은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의 구성에서 전문화와 조직화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영리 공익재단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으며 전담 부서나 그 인적구성이 빈약한 편에 속한다. 대개의 경우 사회참여활동을 다른 업무를 수행하

는 부서에서 부가적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전담직원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한국기업에서 사회참여활동이나 청소년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를 높지 않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60%에 달하는 기업들이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전담부서가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 기업의 사회활동 전문화의 현주소를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여섯째, 우리나라 기업이 사회활동이나 청소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은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있는 조세 감면이나 세제혜택이다. 비록 사회활동이나 청소년사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홍보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일관되게 규제나 허가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기업체 자신들도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지만 선의의 뜻을 가진 기업을 위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청소년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못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장기적 청소년계획의 목적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보강하고 학교를 떠난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일단 기업들과 정부의 생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기업도 청소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

다.

여덟째, 기업들은 정부나 민간의 청소년사업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청소년 수련사업이나 수련시설들이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창조에 훨씬 못미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시설을 갖춘 수련터전을 마련하는데는 토지비용을 포함해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정부가 민간참여와 투자를 유치하려는 영역도 거의 수련터전이나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시설투자와 유치가 민간참여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아홉째,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영역이 장학사업에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 심신수련활동에 참여하고 투자하는 기업의 비율은 고작해서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재단을 조사한 전경련의 한 연구에서도 90여개의 조사대상 가운데 단 2개의 재단만이 청소년 수련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의 몇몇 대기업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에 관심을 보여 기초적인 타당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때 희망적인 관측을 할 수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자세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열번째, 기업들은 아직도 청소년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직접적인 투자나 운영보다는 민간 청소년단체에 대한 후원적 지원이나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의견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업-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가 시설을 제

공하고 기업은 운영단을 책임지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몇몇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시설 제공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책임지고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아직 주도적인 경향을 아니다.

열한번째, 한국의 기업들은 사회참여활동이나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종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과 접촉이 높은 업종에 종사한다고 해서 청소년 대상 수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참여 및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의 설립년도인데, 오래된 기업일수록 청소년사업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기업들도 청소년기본법이나 이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장려하는 청소년 수련사업에 참여하기 보다는 장학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열두번째,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들도 청소년사업이나 사회참여활동 전반에 대한 관심이 적지는 않지만 활발하지는 않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보이고 이러한 사업에 많이 관여하는 경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논의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최고경영자의 관심정도가 청소년 수련사업의 승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수련사업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재벌의 최고경영자에게 수련사업의 중요성과 민간참여 및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열세번째, 청소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기업들도 청소년사업의 정확한 개념, 방법, 사업방향, 그리고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사업의 다양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형편이다.

열네번째, 현재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나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행정규제를 들 수 있다. 청소년사업에 대한 참여나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률, 세제, 정책상의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양식과 문화에 친화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인책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업이 참여하고 투자해서 청소년사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고려사항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론적인 논의와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 정책적 대안

1. 청소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으로 하여금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참여 및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전반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보

아 기업쪽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 면 방어적이고 소극적 개념의 홍보전략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홍보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어떤 참여거리나 투자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의사결정의 첫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2. 기업체의 문화와 의사결정양식에 적절한 접근전략이 중요하다.

기업이란 본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형, 무형의 보상이나 장기적, 단기적 대가가 없으면 청소년 수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기 쉽다. 특히 현대 기업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노조의 설립에 따른 노조의 권력과 영향력 강화이다. 물론 노조가 기업의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참여에 무조건 반대할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나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입장에서는 노조원의 복지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기업 외부의 청소년사업 등에 쉽게 참여하거나 투자할 수가 없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측의 입장에서는 사원복지사업과 청소년 수련사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구상이나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궁극적으로 민간 기업체가 비영리 공익법인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립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게 하여 면세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으로서의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재단법

인으로서의 설립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상적으로는 기업체가 여러 형태의 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운영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는 것이다.

4. 기업이 실시하는 청소년사업의 실패를 파악해야 한다.

민간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수련사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해야 한다. 민간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문제점, 또는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파악도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민간 수련원 업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수련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애로요인과 장애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고려사항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부의 토지정책과 밀접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보상과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의 여건에서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및 투자유도방안과 관련되어 토지문제의 핵심은 그린벨트와 비영리무용부동산의 처리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린벨트가 그동안 국토의 녹지대보호차원에서 시행되었고 또 그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인한 폐해 또한 적지 않았다. 청소년 수련사업을 원활히 시행키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때 그린벨트의 해제나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축허가가 나면 자동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는 단순한 요구보다는 청소년 수련사업과 이 사업에 필수적인 수련시설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청소년 수련사업을 우선적인 목적사업으로 할 경우 수련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린벨트 규제의 조건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만 제정된다면 청소년 사업에 그린벨트 규제의 완화를 조심스럽게 주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주요 토지문제가 소위 5·8조치로 알려진 기업의 비영리무용 부동산에 대한 매각조치이다.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장기적 전망이나 기획에 기초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구입한 토지에 대해 지금 당장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해서 비영리무용으로 판정되고 그래서 강제 매각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이 뼈아픈 일이지만, 또 정부의 입장도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가 국가의 토지정책에 장애나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요소가 있어 보인다. 5·8조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든 청소년 수련사업을 위해서 기업에서 비영리 공익재단에 토지를 출연할 경우에는 강제 매각조치에서 유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5·8조치 자체가 워낙에 국가 중대사이고 그 파장이 경제문제나 기업문제에 국한되기 보다는 더욱 근원적인 사회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면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청소년 수련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민간의 참여가 투자도 시급하다. 국가나 민간단체가 청소년을 위해 무엇인가 유용한 활동을 조직하고 싶지만 재정적인 문제의 해결이 활동 조직화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민간참여나 투자를 담당할 핵심적인 민간부문은 재정적인 능력을 갖춘 기업체이다. 하지만 기업체의 특성은 이윤이나 영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선뜻 참여하거나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청소년 수련사업을 기업의 영리사업의 일종으로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청

소년 수련사업의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 수련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의 참여와 투자의 속성을 함께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런 방안 자체가 쉽지 않다.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 몇몇 예로서 제시된 것들이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높이거나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들이다. 또한 기업들에게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을 권장하고 청소년 수련사업을 기업재단의 주요 목적사업의 하나로 권장하는 일들이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년 정책이 중요하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사업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는 하나 청소년 사업의 중요성에만 호소해서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청소년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도덕적인 당위나 명분에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실질을 점목시키는 일이다.

참 고 문 헌

김만두(1987),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겨울호.
 박경원(1989),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신유근(1986), 기업과 사회. 서울:경문사.
 신유근·한정화(1991), 한국기업의 사회참여활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사회개발원.
 정구현·박상용·박태규(1991),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봉사. 장기신용은행부설 경영연구원.
 체육청소년부(1991),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완결편.
 Blankart, Charles(1985), “Market and Non

-Market Alternatives in the Supply of Public Goods: General Issues”, in Francesco Forte and Alan Peacock(eds.), *Public Expenditure and Government Growth*. Oxford: Basil Blackwell.
 Buono, A. F. and L. T. Nicholes(1990), “Stockholder and Stakeholder Interpretations of Business' Social Role”, in *Business Ethics: Readings and Cases in Corporate Morality*. 2nd ed. W. M. Hoffman and J. M. Moore(eds.), New York: McGraw-Hill.
 Clark, Helen(1947),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ocial Work*.

- Donnison, David(1984), "The Progressive Potential of Priviization", in *Julian Le Grand and Ray Robinson(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s Stat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Dunleavy, Patrick(1986), "Explaining the Privatization Boom: Public Choice Versus Radical Approaches", *Public Administration*, Vol. 64, Spring.
- Freeman, R. E. and D. L. Reed(1983), "Stockholders and Stakeholders: a New Perspective on Corporate Government",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25, Spring.
- Kammerman, Sheila B.(1983), "The New Mixed Economy of Welfare: Public and Private", *Social Work*, Vol. 28, Number 1.
- Kolderie, Ted, "The Two Different Concepts of Privat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 : 4.
- Savas, E. S.(1977), "An Emperical Study of Competition in Municipal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7, Nov./Dec.
- Useen, Michael(1988), "Market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Corporate Contribution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32, Number 2, Winter.
- Webb, Siney(1914), "The Extension Ladder Theory", *Survey X X X I*, No. 23, March 7.